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4. 1(금) 배포시		
배 포 일시	2011. 4. 1(금) 09:30	담당부서	재정정책과, 재정기획과, 예산기준과
담당과장	양총모 (2150-5310) 우범기 (2150-5330) 성일홍 (2150-7150)	담 당 자	황경임 사무관 (2150-5312) 박성주 사무관 (2150-5332) 손창범 사무관 (2150-7152)

제목: 「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」 개최

-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.1(금) 09:30 정부중앙청사에서 「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」를 개최하여,
- ‘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’, ‘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’, ‘재정통계 개편방안’, ‘보조금 준치평가제도 운영방안’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
< ‘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’ 관련 >

- ① 윤증현 장관은 오늘 재정위험관련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**민관 합동 재정위험관리위원회**를 구성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
- 앞으로,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 지출 효율화 및 세입확충 방안, 중장기 재정위험 점검·대응 등 재정분야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
 - 재정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민간위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,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와는 차별화된다고 언급

② 윤증현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**빠르게 개선중**이며, 주요국에 비해 **매우 양호한 수준**이지만

○ 향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여러 가지 잠재적·도전적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평가

-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, 저출산·고령화 가속화로 세입기반 감소 및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할 전망

* '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('09년 3,537 → '50년 2,242만명)로 성장률 둔화 및 세입기반 약화 우려

- 빈발하는 글로벌 경제쇼크는 “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(small open economy)”인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,

*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속도('08년 3/4. 3.3% → 4/4. △3.3%)는 OECD 국가중 아일랜드(△1.6% → △9.1%) 다음으로 최고

- 준비해야 할 통일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

* 독일은 '91~'03년간 연평균 GDP의 5% 수준 통일비용 부담, 우리나라는 연간 GDP대비 최저 7% 이상씩 10년 이상 소요 전망('08, 조세연)

③ 따라서, 이러한 재정위험요인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우리의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,

○ 최근 PIGS국가 재정위기, 일본의 재정악화 등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,

-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,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

○ 아울러, 지금 당장 재정위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, “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”는 “거안사위(居安思危)”의 마음가짐으로

- 우리가 당면한 재정위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, 정책대응을 해나가는데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

< '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' 관련 >

① 윤증현 장관은 오늘 논의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요인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면서,

-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~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,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

* 건보 재정수지(억원) : ('06)△747 → ('07)△2,847 → ('08)13,667 → ('09)△32 → ('10)△12,994

- 향후, 고령화 가속화,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증가, 성장률 저하로 인한 수입감소로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

* 現체계 유지시 재정수지 전망(조원, '11.1 건보공단추계) : ('20)△17.3 → ('30)△49.6

- “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,

- 그간 부진했던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어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

②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*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,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며,

*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(일반회계 14% + 건강증진기금 6%)를 '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

- 아울러, 과잉진료·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,

-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함

< '재정통계 개편방안' 관련 >

- ① 윤증현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통계가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IMF '86 GFS에 따라 작성되고 있어
 -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최신 국제기준('01 GFS)에 부합하지 않고, 국가채무 규모도 과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,
 - '08.11월부터 민관합동 T/F를 운영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하여, 지난 1.26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,
 - 이후, 공청회,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편안을 보완중에 있고, 오늘 위원회 논의,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
- ② 세계 주요국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(OECD 30개국중 15개국이 발생주의 도입, '09년 기준),
 - 우리나라도 '11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시점에서,
 -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그 간 제외되어온 발생주의 부채·수지 항목, 일반정부 공공기관이 추가되고,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재정통계의 투명성·신뢰성이 제고되고,
 - 또한,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간 비교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

< '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' 관련 >

① 윤증현 장관은 최근 언론 등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,

- 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

②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운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

- * 최근 5년간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(8.9%) >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 (6.9%)

- 보조사업 존치평가*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, 평가결과를 '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임을 강조

- * 보조금일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

- 그리고,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

③ 보조금은 일단 시작되면 폐지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인 만큼

-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존치평가는 세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,

- 관계부처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·점검을 당부함

[별첨1] 2011년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

[별첨2]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

기획재정부 대변인

※ 참고 :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

안건 및 담당부서	담 당 과 장	담 당 자
〈①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	양충모 (2150-5310)	민지원 사무관 (2150-5313)
〈②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	양충모 (2150-5310)	이재화 사무관 (2150-5314)
〈③재정통계 개편방안〉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	우범기 (2150-5330)	박성주 사무관 (2150-5332)
〈④국고보조사업 준치평가제도 운영방안〉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	성일홍 (2150-7150)	손창범 사무관 (2150-7152)

별첨

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

2011. 4. 1

기 획 재 정 부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	2
1. 위원회 구성	2
2. 위원회 운영방식	2
3. 중점 논의과제 및 관리	3

I. 추진 배경

- '10~'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내 협의·조정기구 필요성 제기
 - 경제정책조정회의,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주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정이슈나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한계
- 이에 '10.5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위원회의 한시적('14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) 설치·운영방안 보고
 - 이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외에 저출산·고령화, 통일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,
 - '재정위험 관리위원회'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보완
- 앞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분석·대응 뿐만 아니라, 지출효율성 제고·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분야 전반에 걸쳐 논의할 계획
 - 또한, 주요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재정이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방향을 도출
- 이를 통해 장기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국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

Ⅱ.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

1 위원회 구성

- **정부위원(11명)** : 재정부(위원장) · 교과부 · 국방부 · 행안부 · 농수산
식품부 · 지경부 · 복지부 · 고용부 · 국토부장관,
국무총리실장, 금융위위원장

* 단, 위원장이 **안건에 따라**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
기관의 장도 참석 가능

- **민간위원(7명)** : 현오석(한국개발연구원장), 원윤희(조세연구원장),
강병규(한국지방세연구원장), 이만우(고려대 교수),
백웅기(상명대 부총장), 안종범(성균관대 교수),
엄영숙(전북대 교수)

* 위원회 규정(대통령령)상 민간위원은 8명까지 임명 가능

2 위원회 운영방식

- **(개최시기)**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, 필요시 수시 개최*

* 위원 5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**(안건제출)** 상정안건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
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

- 필요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‘실무조정위원회’
(위원장 :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)에서 협의 · 조정

- ◇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의 분석·대응 외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확충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
- ◇ 논의된 과제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재정운영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

□ **(논의과제)** 재정 전 분야에 걸쳐 미래 **재정위험 요인**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**장·단기 대응방안** 강구

- 복지지출, 지방재정, 공기업 부채, 통일 재원 등 재정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
- 연금, 건강보험 등의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건전화 방안
- 주요 재정사업의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
-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·장기계획 등

□ **(과제관리)** 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

- 추진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예산반영, 법령 개정 등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보고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
-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는 쟁점사항을 검토·보완하여 제시한 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논의

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

- ◆ 평가의 객관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구성·운영
 - ◆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활용·보완하여 추진
 - 자율평가와의 중복방지 및 각 부처 평가업무 부담 경감 차원
- * 존치평가 근거를 규정한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중

- (평가단 구성) 평가의 질 제고와 1인당 평가 부담을 고려하여 20여명 수준으로 구성
 - 존치평가 유경험자 및 사업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4개팀(총괄·경제·사회·행정)으로 구성
 - (평가단 운영) 용역 형식으로 발주, 평가실시
 - (평가단 역할) 보조사업 존치여부를 평가
 - 자율평가의 계획·집행·성과, 3단계중 “계획”부분을 세부적으로 특화하여 존치 평가에 활용
- * 사업 및 재정지출의 타당성,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집중 평가
- (대상사업) 자율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
(매년 250~300여개 예상)
 - * 지자체 포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광특회계 자율편성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
 - (활용방안) 보조사업 폐지여부를 판단, 예산편성시 활용
 - (추진계획)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구성(4월초) → 평가 수행(4월~6월) → 평가 결과 '12년 예산편성 반영(7월~9월)